



# 국가R&D사업 규정 단일화 되어야<sup>1)</sup>

국가R&D사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지속적인 국가 R&D사업의 투자확대는 과학기술력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켰으나, 국가R&D 관련 법제의 단일화 요구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의 세계는 성장세 둔화, 경기부양효과의 감소와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류의 삶 자체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투키디데스 함정’의 한복판에 서있어 체감하는 위기감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클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는 우리에게 과학 기술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라는 숙제를 던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주력기술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의 연구역량 강화, 작년 여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자립화,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개선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전후戰後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Fast Follower정책을 추진해오다가, 현재는 글로벌 환경에서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First Mover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변화된 정책기조에 맞춰 국가 R&D 투자규모도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 김건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영본부  
본부장/법학박사  
✉ ghkim7@kbsi.re.kr

우리나라의 국가R&D사업 집행규모는 2014년 17조 6천억 원 규모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그 규모가 19조 8천억 원으로 해마다 약 2.9%씩 증가하여 왔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R&D사업 비중은 1.11%로 독일 0.92%, 일본 0.69%, 프랑스 0.66%보다도 높다. 2018년 기준 국가R&D사업의 정부부처별 집행규모를 보면 과기정통부가 가장 높은 비중 33.8%, 6조 6,779억 원을 차지하였으며, 산업통상부 15.7%, 3조 1,059억 원, 방위사업청 14.9%, 2조 9,442억 원, 교육부 8.8%, 1조 7,382억 원, 중기부 5.3%, 1조 426억 원 순으로 집행되었다<sup>2)</sup>.

국가R&D사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First Mover로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지속적인 국가 R&D사업의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력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켰으나, 국가R&D사업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관련 법제의 단일화 요구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주로 하는 법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4조는 부처별로 소관 국가R&D사업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R&D관리규정은 현재 법률 72개, 고시·훈령 36개, 지침·예규 44개로 총 152개로 운영되고 있다<sup>3)</sup>.

부처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체계는 해당 R&D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정산기준, 제재기준, 연구개발비 환수, 기술료 산정기준 등이 제각각이어서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 R&D 사업관리의 측면에 치중한 여러 규정들은 연구자의 연구몰입도와 연구자율성을 떨어뜨리는 틀을 범하게 되었고, 국가R&D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입장에서도 부처간 업무 협조 및 연계 부족 등으로 국가 R&D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정부부처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체계는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과 관련한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등도 정부부처별로 별도로 설계·운영하게 하여 연구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식과 연구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지난 2019년 9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별,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하였다. 표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하였다<sup>4)</sup>.

표준안의 마련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도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zbaro, 산업통상자원부 RCMS시스템으로 통합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Ezbaro시스템을 사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 RCMS시스템을 사용하게 하였다<sup>5)</sup>.

더 나아가 e-R&D, iTech+ 등과 같은 과제지원시스템과 KRI, NTIS 등의 연구자정보 시스템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R&D사업 규정이 단일화 되지 않은 탓에 연구현장에서는 시스템의 통합 외에는 예전과 다른 차이를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 개방과 협업의 R&D 환경조성을 위해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과 같은 법률의 마련과 국가R&D관련 규정의 표준화·단일화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되는 오늘이다.

- 1) 이 제안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제안공모에서 가작을 수상하였음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9 과학기술통계백서, 2020, p36~p41.
- 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분석, 2019, p117.
- 4) 과기부 보도자료, 2019.10.1.
- 5)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분석, 2019, p124.